



홍콩 투쟁

# 총파업과 시위로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반격을 노릴 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 기사 3면

조국 문제로  
드러난  
계급 불평등과  
민주당의 위선

12면

민주노총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적절했는가?

4면

알렉스  
캘리코스 강연  
세계화는  
끝났는가?

8~10면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6~7면

성범죄가 아니라 성교육이다  
광주교육청과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7면

서울대병원 800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얻은 소득

11면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향의?

2면

#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성소유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건너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클래스’(Class)가 얼마나 다른지 더 여실히 느껴져 열 받는다.

8월 23일 열린 고려대 1차 시위에 500여 명이 모였는데, 학생들은 삼삼오오 집회장으로 들어가며 “나도 억울하지만 엄마, 아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8월 28일 열린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는 800여 명이 모였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투표했다는 한 학생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 그 시절 우리가 몰랐던 제도

그런데 유시민 씨(이하 존칭 생략)는 서울대 집회를 가리켜 “뒤에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한다”며 “왜 마스크 썼냐”고 조롱했다. 유시민은 “조국 팬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고 진영논리라는 건 황포이자 반지성주의, 선동”이라며 우파를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도 진영논리로 서울대 학생들 배후에 한국당이 있다고 한다.

한편 우파들도 이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이 시위를 이용하려고 지지하는 척한다. 계급 불평등 해소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말이다.

오히려 이처럼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집회에 나온 학생들이 비정치성을 표방했을 것이다.

물론 ‘비정치’는 가능하지 않다. 어떤 운동이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표방한 이데올로기에 약점이 있더라도 운동 참가자의 구성과 염원이 더 중요하다. 훈련된 활동가도 아닌 젊은 사람들이 처음 모일 땐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 일부 학생 운동 단체들은 서울대, 고려대가 학벌 서열의 정점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특권층이라며 비판하고 거리를 뒀다.



박혜신

계급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공분을 특권 의식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다. 물론 이 대학들에 상대적으로 상층 계급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전부 그런 것도 아니다.

단일한 계급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경쟁과 소외라는 비슷한 경험,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조건 덕분에 사회의 모순에 훨씬 크고 민감하게 진동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항에 나선 잠재력도 있다.

가령, 최근 쯔뚱 같은 더위에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참혹한 현신을 폭로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하는 서울대 학생들도 있다. 그 중엔 자사고 출신도 있고 부잣집 학생도 있다. 이것이 문제인가?

한 서울대 학생은 집회에서 “국민의 57퍼센트가 조국 교수 임명에 반대”하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부 … 한 국당 지지자일 리 없다”며 시위를 보수 엘리트 소행으로 몰아가는 주장의 모순을 꼬집었다.

한편, 이런 비판이 일자 조국은 은근슬쩍 계급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바꿔치기하는 꼴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은 자신은 “김용균”의 고통을 “10분의 1도 모를 것”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김용균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김용균법’을 만들어 노동자들과 유가족을 우롱하고 바로 그 시기에 민주노총을 앞장서 비난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 조국이 할 말은 아니다.

올해 초 고려대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 단체가 주최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초청 강연회에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대학 가는 걸 사치라 여겨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실업계를 졸업하면 대부분 비정규직, 생산직, 공장에 취업합니다. 정부가 저렴한 노동

력을 위해 실업계를 만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뿐입니다.”

## 교육 제도만이 문제인가?

문재인은 아예 안 3개국 순방 출국 전 “대학 입시제도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최근 일부 지방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를 되돌린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애초에 권력과 부의 불평등은 계급의 존재에서 비롯하므로 소위 더 ‘공정한’ 입시 제도로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청년들은 “정권 하나 바꾸려고 촛불 든 거 아니다” 하고 외쳤다. 이는 자본주의의 실패가 낳은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의 문제였다.

이런 계급적 분노를 정치와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청년·학생 좌파는 청년 세대의 정당한 공분을 대변하고 시위를 지지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와 항의를 우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급진적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다.

##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2008~2011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밀려 양보한 중국 정부

##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다

김영익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갈수록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운동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홍콩 운동은 석 달 넘게 이어졌고 송환법 철회 말고도 요구가 더 확대됐다. 시위 참가자 다수는 행정장관 캐리람의 사퇴도 원한다.

9월 4일 캐리 램은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국 정부는 캐리 램이 한 발 물러서게 하려는 듯하다. 물론 시위대 요구(경찰 폭력 조사, 송환법 철회, 연행자 석방·사면, 시위의 폭동 규정 철회, 직선제 실시) 중 극히 일부만 수용함으로써, 운동의 분열을 피하며 시간을 벌다가 다시 반격하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운동의 온건한 지도부인 민간인권전선은 옳게도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시위대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8월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홍콩에 진입하는 중국군 장갑차와 군용 트럭 사진을 공개했다. 홍콩 경찰은 8월 31일 집회와 행진을 불허했다. 30일에는 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민간인권전선은 결국 집회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8월 31일 많은 홍콩 민중이 거리로 나와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경찰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거리에 등장했다.

경찰은 물대포·최루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실탄 경고 사격까지 했다. 경찰 특공대가 최루액을 뿌리며 시위 참가자들을 마구 폭행하고 연행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9월 1일 시위대가 공항 도로와 철도를 봉쇄하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다.

정부의 위협과 폭력은 시위대에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줬다. 9월 2일 홍콩 데모시스트(2014년 우산운동 출신자들이 만든 정당)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대응은 우리에게 평화 시위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학생들은 수위 높은 시위를 고려하게 됐다. 그래서 동맹휴업을 하는 것이다. 동맹휴업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타임》9월 2일치 기사)

### 노동자 파업

9월 2일부터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200여 학교에서 1만여 명이 동맹휴업에 참가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간띠를 이루어 학교 일대를 에워쌌다.

노동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9월 2~3일 건설·교통·관광 등 20여 개 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프린스오브웨일스 병원과 퀸메리 병원에서는 노동자들이 송환법 반대 운동을 지지해 연좌 농성을 벌였다.

홍콩 권력자들은 투쟁의 기세에 당혹감과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9월 2일 로이터 통신은 캐리 램과 기업인들의 비공개 회동 녹취를 입수해 폭로했다. 그 회동에서 캐리 램은 자신이 “행정장관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캐리 램은 시위로 인한 압박감도 토로했다. 요즘에는 외출도 어렵다면서,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검은 티셔츠와 마스크를 쓴 군중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기회만 된다면 사과하고 사퇴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캐리 램은 이렇게도 말했다. “행정장관으로서 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이라는 두 주인을 섬겨야 하기에 정치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중국이 홍콩 시위를 “주권과 안보” 문제로 보고 있어 본질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고도 했다.

### 운동의 심화·확대

따라서 홍콩 시위대가 송환법 철회 말고도 다른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운동이 심화·확대돼야 한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홍콩 시위를 서방이 조종하는 “색깔 혁명”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위협한다.

이런 비난과 위협에는 홍콩 시위가 본토 민중과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따라서 홍콩 운동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본토 민중에게 연대를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서 성장하는 노동자 투쟁을 감안하면 이것은 전혀 비현실적 과제가 아니다.

게다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으로 이주한 본토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인구가 750만 명 남짓인 홍콩에서 이것은 굉장한 규모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중국어 편집자인 람치링은 이렇게 말했다. “본토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 애써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송환법 반대 운동 내에 많다. ... 홍콩 주민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중국 본토와의 일체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본토 노동운동과 사회 운동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태세가 돼 있다.”

이런 증언은 홍콩 운동이 결코 ‘색깔 혁명’이 아님을 보여 준다.

물론 홍콩 운동 안에는 다른 지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데모시스트 사무총장이자 우산운동 스타였던 조슈아 왕은 8월 31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을 압박하라고 호소했다. 이런 주장에는 서구식(즉,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깔려 있다.

트럼프 같은 서방 지배자들은 송환법 반대 운동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홍콩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 이용하려 한다. 동시에 이 운동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홍콩 운동은 이와는 다른 지향으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이 실현하려면 홍콩 노동자들의 계급적 행동이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 본토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전망을 실현할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다.



홍콩 시민들은 강경한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8월 25일 홍콩 시위

사진 출처: Studio Incendo(블로그)

## 홍콩 시위는 미국이 배후인 “색깔 혁명”?

홍콩 운동 내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을 “색깔 혁명”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국내 진보·좌파 일부도 받아들인다. 중국을 미국 제국주의에 대립하는 반제국주의 또는 (심지어) ‘사회주의’ 세력으로 보고, 홍콩 시위를 미·중 갈등의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민중당 정책위는 홍콩 시위를 “미국이 주도하는 외부세력”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어 보고자” 개입한 일로 치부한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운동도 서구식 민주주의에 도전하지 않았던 운동이다. 박근혜 탄핵이 확정됐을 때 서구의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모두 이 조치를 환영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그 때문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특정 반정부 운동을 친미적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공작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을 미국은 “혁명”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런 “색깔 혁명”은 대중의 진정한 불만이 견장을 수 없이 폭발하기 전에 현지 지배계급 일부 분파가 그 불만을 영풍한 방향으로 가로채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 과정을 미국이 후원해

줬다. 예컨대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한 친러 지배자들과 경쟁하는 똑같이 부패한 친서방 지배자들이 시위를 주도했다(소위 오렌지 혁명). 그 결과는 진보가 아니라 옆으로 계걸음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홍콩 운동을 이와 같은 것으로 동일시해선 안 된다. 이 운동에 주요한 구실을 맡은 단체와 개인들은 지배계급 내 한 분파가 아니며,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홍콩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 싸워 왔다. 그들의 요구 또한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들이다.

특히, 이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노동계급이다. 대체로 개인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갈수록 노동계급의 집단행동이 두드러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민중당 정책위는 이 시위의 배경이 된 홍콩의 빈부격차와 실업 등이 중국 책임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주의 세력들이 [일국양제라는] 특혜를 잘못된 방식으로 독점”한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홍콩은 “사회주의”를 (열토당토않게) 표방하는 중국 지배 관료와 홍콩 자본가들의 합작품이다. 두 사회집단 간에는 적대적인 갈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착취 체제를 유지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노동계급은 집단적 투쟁의 경험에



홍콩 투쟁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중당 청년 회원들의 토론회

서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킨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하자 거의 모든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전두환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착각할 만큼 당시에는 미국에 환상을 품었다. 그러나 광주항쟁 경험은 한 세대의 청년·학생들이 미국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실체를 인식하고 급진화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중엽 이후로는 노동계급도 급진화 물결에 가세했다.

홍콩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식 발전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서라도 홍콩 바깥의 국제 좌파들은 홍콩 운동을 지지하면서 서방 제국주의와 자본가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 아직도 사회적 대화에 미련?

#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부적절했다

강동훈

9월 3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하 존칭·직함 생략)이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집행부와 면담을 했다. 김상조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70여 일 만이다.

김상조는 취임 직후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개악 추진 등에 반발해 방문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김상조의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면담을 전후로 톨게이트, 기아차 비정규직 등 몇몇 현안 투쟁들과 관련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면담을 성사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법하다. 그러나 뒤에서 말하겠지만, “노력하겠다”는 원본적인 말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정부·민주당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서, 노동자 운동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계급 불평등이 조국 논란의 핵심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의 연출이 조국 반발 여론 무마에 필요하다고 봤음



노동자 뒤통수를 쳐 온 사이비 개혁 정부의 구조 요청에 응할 이유 없다

직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추진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침 세계경제 불안정 심화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갈등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회적 대화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건대 민주노총 집행부가 김상조의 면담 요청을 수락한 것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 준 셈이다. 물론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 악화와 한국당의 공세로 곤경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공약 이행이나,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본질과, 경사노위가 노동자에게 양보를 압박하려는 기구였다는 점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명환 집행부는 여전히 사회적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계급투쟁의 현실은 정반대다. 위기

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며 투쟁하고 몰아칠 때 각종 노동개악을 막고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노동개악 철회와 ILO협약 즉각 비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의 위기 때 김상조와 면담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문재인 정부에 진보적 분철을 해 주고,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에 강조점을 둔다는 신호를 기층 노동자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서 김상조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 관행”을 운운하며, 공공부문의 ‘노정협의 틀’ 구성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개선 약속도 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이 보장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규직화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변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는 ‘또 다른 하청회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면담 장소까지 들어와 직접고용을 요구했는데도 말이다.

김상조가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톨게이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편(파견)을 해결하라”고 항의했지만, 김상조는 어느 것 하나 확답하는 게 없었다. 민주노총 건물 입구에서 팻말 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 전교조 조합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9월 3일 노동부 차관과 기아차 비정규직 면담, 9월 4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 면담도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김상조는 김명환 위원장이 요구한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 중단이나 재벌 개혁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민주노총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점들로 미루어 보건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요구한 대로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협의 틀이 구성된다고 한들 노동개악 저지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1기 경사노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정협의를 한다면 서도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협의에 기대를 거는 척하거나 실제로 기대를 걸지 말고, 현재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확대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하반기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좌파들은 노동자들이 좀 더 투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화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

##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정선영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제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인데 올해 7월에는 4퍼센트대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중국에 고급 기계류를 판매하는 독일과 일본 등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낸다. 독일의 연간 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의 산업 생산도 올해 들어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올해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도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스탠더드앤

드푸어스(S&P)500 상장 기업들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순수익은 줄어 들었다. 특히 비금융 기업들의 이윤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산업 전망을 나타내는 구매자관리지수(PMI)도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50 이하로, 향후 산업 생산이 축소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업 부문에서 이윤 하락이 계속된다면 다른 부문들의 성장도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세계 산업 생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과 반도체 수출 등이 감소하며 수출은 9개월째, 투자는 5분기째 감소했다. 7~8월 원화 가치는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다음으로 크게 떨어졌다.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8월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 친기업 경기 부양책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노골적으로 친기업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과의 갈등 속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이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방향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강조됐다.

가장 큰 예산 증가를 이룬 부분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인데, 27.5퍼센트나 늘었다. 부품 기술 산업들, 데이터·네트워크·AI·5G 등 4차 산업혁명 산업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등 삼성, 현대, LG, SK 등 재벌 대기업 지원 사업 등에 큰 돈이 투자된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2.9퍼센트나 늘었다.

보수 진영은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2.8퍼센트가 늘었다며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만, 그중 70퍼센트는 공적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이미 정해져 있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구직급여가 2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거세질 구조조정을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예년보다 13만 명 더 늘리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 외 일자리 예산들은 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주거나 직업 훈련 비용을 보조하거나, 창업 하라고 권유하는 등의 시장주의적 방향에 맞춰져 있다.

국방비는 올해도 7.4퍼센트 늘었지만, 교육 예산은 2.7퍼센트만 증가했다. 그나마도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인재” 등 고등교육에서 친기업적 인재 양성이 강조됐고, 유아·초중등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확대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들은 제자리걸음이다. 대량 해고된 강사들의 처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관련 예산 등도 찾아 보기 힘들다. 소방 예산은 오히려 19.1퍼센트가 삭감됐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이윤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악 등 반노동 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이윤 경쟁 물이에 노동자들이 협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는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매해 GDP의 3~10퍼센트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기업을 위한 경기 부양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해 왔지만, 여전히 경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부자들을 살리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 살리기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청와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발표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문제로 첨예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이강래가 발표를 연기한 다음날,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또한 9월 4일 오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 지도부와 면담을 했다.

그동안 6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절규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정부가 대화에 나서자 적잖은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청와대가 막 나가는 도로공사와 이강래를 강제해 주길 바랄 것이다.

## 대화와 타협의 제스처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김상조는 “삼권분립을 벗어나 조치하는 것 상상 못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나머지 1200명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권분립 운운은 어처구니 없는 책임회피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허가해 준 것은 “삼권분립”인가?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자회사 정책이 야기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김종우 기자

정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자 8월 31일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김상조의 말은 사실상 기존 도로공사 입장인 자회사 방안을 고수한다는 뜻이다. 대화와 타협 제스처를 취하는 정부 태도에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

또 정부나 도로공사 측은 투쟁 대열을 분열·약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대비도 필요하다.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김상조는 톨게이트 문제는 공공기관 전체에 해

당하는 복합적 사안이라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비정규직 투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기를 봐서 도로공사 측은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에게 업무발령을 내릴 수도 있다. 발령을 몇 차례 거부하면 해고 협박이 들어올 수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도로공사 측이 분리교섭 시도에서 노렸던 것처럼 여전히 한국노총 쪽을 흔들어서 불충분한 안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측 노동자들이 투쟁 구심을 유지하며 전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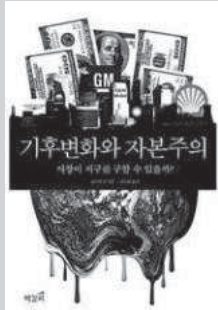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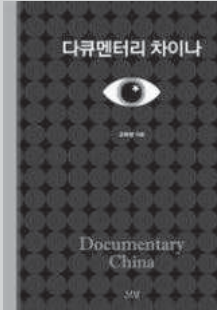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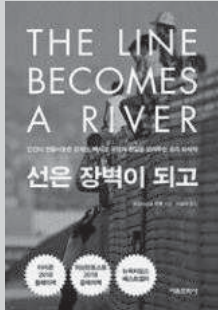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상황을 이용

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정세 속에서 투쟁해 직접고용 약속을 받은 것을 보면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유실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공언한대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실질적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양효영



## 추석연휴에 읽을 만한 책들



누구에게나 술술 읽힐 책들을 추천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마음의 양식도 채워 보세요.

###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노현웅 외 지음, 이재임 그림, 철수와영희)

제조업 주야 맞고대, 콜센터, 초단시간 노동(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업체 등등 <한겨레> 기자들이 직접 노동 현장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 우리도 교사입니다

(박혜성 지음, 이데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혜성 교사의 이야기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차별뿐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으로 투쟁해 온 기간제 교사들의 삶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한다.

###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효영 지음, 나남)

가난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참아야 하는 농민공 가족 등 중국의 평범한 대중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다룬 책. 고도성장 신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거짓에 가려진 중국 사회의 이면을 들춰낸다.

###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마르크스주의는 어렵다는 근거 없는 믿음 이 퍼져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왜 필요한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회변혁과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흥미로운 13가지 질문을 다룬다.

###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폴 쏫 지음, 차승일 역음, 책갈피)

사회주의를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뤄진 끔찍한 왜곡에서 구해 내고,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 추천한다.

### 선은 장벽이 되고

(프란시스코 칸토 지음, 서경의 옮김, 서울문화사)

저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3년간 미국의 국경 순찰대 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경 통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조너선 닐 지음, 김종환 옮김, 책갈피)

2011 환경책큰잔치 선정 ‘올해의 환경책’, “그냥 술술 읽히는 대중교육용 책이다.” 오늘날 더욱 심각해진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과 대안을 찾는 독자에게 강추한다.



# 마르크스주의와 차별

때때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을 무시한 채 계급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오해받는다.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라 베넷**은 노동계급의 단결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종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45년 전 동성애는 영국에서 범죄였다. 그러나 이제 동성 결혼은 현 정부 임기 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은 2012년에 발표됐고 영국에서 동성 결혼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2014년에 합법화됐다.] 이것은 성소수자, 여성, 흑인 등에 대한 차별에 맞선 투쟁이 성취한 여러 전진의 한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전진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히 엄연한 현실이다. 2012년 3월 '동성애 치료소'를 운영하는 한 기독교 단체는 “당당하게 탈-게이했어요! 걱정 말아요!”라는 문구로 런던 버스에 광고를 내려 했다. 로마인·유랑민·싱글맘 차별, 심지어 비만인 사람에 대한 차별 등 이사회에는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의 일부는 공공연하게 법에 명시돼 있거나 국가기구에 의해 수행된다. 모국이 아닌 나라에 살면서 일할 권리나 동성과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 예다. 그러나 차별은 국가나 사회가 돌아가는 좀 더 비공식적인 방식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도소에는 백인보다 흑인 수감자가 훨씬 많고, 기업 이사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런 일’로 여긴다.

그러나 차별은 저항을 낳기도 한다. 꼭 차별의 당사자만 저항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 트레이번 마틴이라는 청년이 미국 플로리다의 경비가 삼엄한 부자 동네에서 살해당한 것에 광범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 그런 예다. 그는 단지 후드티를 입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계기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별의 경험일 때가 많다.

## 인간 해방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정신

마르크스주의가 받는 가장 흔한 비난은 마르크스주의가 “경제결정론”이며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 차별에 관한 까다로운 문제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말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민족억압, 인종차별, 성차별 등 온갖 차별을 다룬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공산당 선언》이 말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가 발전하는 조건인” 사회와 인간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이다.

그렇다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우선, 차별은 압박감이 아니다. 차별은 심리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별받는다고 해서 꼭 차별을 자각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당하지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기꺼이



7만 명이 참가한 2019년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염원을 보여 준다

받아들이거나 램덴서[상대 무릎 위에 앉아서 선정적 춤을 추는 사람] 경력을 ‘선택’하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울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질환이 차별과 연관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태와 차별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은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지배당하거나 통제 받는다고 느끼는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차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흑인도 백인을 차별하거나, 여성도 남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이 착취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어떤 활동가들은 계급 차별을 그저 차별의 하나로 보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나란히 놓는다. 물론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에 의해 차별받는다는 것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이런 진술은 자본주의의 핵심에 있는 계급 관계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계급 관계의 핵심은 착취다. 착취란 노동자를 노동에서 소외시켜 그에게서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것이다.

## 차별의 역사

마르크스는 차별이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특징, 따라서 불변하는 특징이 아니라 역사적 발명품이라고 봤다. 마르크스의 동료인 엥겔스는 여성차별



의 기원을 계급 사회의 출현에 따른 가족의 형성에서 찾았다. 가족은 수세기 동안 크게 변했지만 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지금 세대와 이전 세대 노동자를 돌보고 다음 세대 노동자를 기르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이 나라(영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성은 대부분 노동을 하지만, 이들은 가족에서 하는 구실 때문에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고 경력을 쌓기도 어렵다.

어떤 형태의 차별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인종차별은 노예무역과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을 항상 이간질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동성애”라는 새로운 섹슈얼리티가 발명됐고, 사회와 가족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그러나 모든 차별은 물질적 기반이 있으며 계급 사회의 구조와 동학에서 출현한다. 차별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뒷받침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의 성격이 그 이전 사회와 다르다는 점을 포착했다.

봉건제와 노예제 사회에서 압도 다수 대중은 노예(노예 주인의 소유물)이거나 특정한 토지와 영주에 예속된 농노였다. 이런 사회는 위계가 엄격했고 각자 ‘자기 분수’가 있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여겼다.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자 새로운 사상이 생겨났다. 봉건제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연 부르주아적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가치를 내걸었다. 이전 사회에 견주면 이는 인류에게 큰 전진이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시장에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취한다. 모든 것은 상품이 되며 노동력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특정한 영주나 주인에게 예속돼 있지 않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상은 생산을 조직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류 압도 대

다수에게 자유란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에 불과하다.(그나마 노동력 수요라도 충분하면 다행이다.) 자본주의는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줬지만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누리지 못하게 막았다.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협업에 점점 더 의존하지만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한데 결집시키는 만큼 분열시키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잔업·주택, 심지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두고 끊임없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차별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의 골을 깊게 판다. 예컨대 대중매체와, 권력자들이 운영하는 정부는 이주 노동자가 정주 노동자보다 열등하다는 시각을 조장한다.

## 소외

이러한 분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소외로 뒷받침된다. 소외는 무력감을 낳으며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특히 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는 다른 이들을 깔보고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자기에게 통제력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백인은 흑인을, 남성은 여성을 깔볼 수 있다. 그리고 차별받는 집단도 다른 차별받는 집단을 깔볼 수 있다. 예컨대 “이주민 2세”가 지금 이주한 사람들을, 성소수자가 장애인들을 깔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노동계급 일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차별이 자본주의에 중요한 이득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주의를 존속시킨다는 점을 보지 않는다.

물론 특정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집단은 그 차별을 받는 집단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별을 받지 않는 이들이 그 차별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예컨대 여성 풀타임 노동자가 동일직종 남성보다 15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남성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가 더 쉬워질 뿐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모두의 임금 인상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남성 노동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는 동료 남성의 성차별적 언행과 제스처를 통해 차별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행한 것은 동료 남성일지라도 차별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즉, 자본주의에 토대가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워야 한다.

소외와 왜곡된 자유와 평등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차별이 끼치는 해악을 기꺼이 내면화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기에 우리는 차별의 가장 해로운 증상을 개인 탓으로 여기게 된다.

##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체제

자본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같은 사회에 사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을 주적으로 삼게 하려고 무척 애쓴다. 자본주의는 집단적 힘으로 자본주의를 뒤엎을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이간질해서 지배력을 유지하며,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와 함께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도, 변화의 핵심 주체로 노동계급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차별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모든 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받는 집단 자체가 차별을 극복하는 데에서 핵심 주체라고 본다. 최근[2012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전(前) IMF 총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성폭행 미수로 기소됨]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시위대가 외친 구호 하나는 “단결한 여성은 패배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성과 단결해야 하는가? 스트로스칸의 후임자이자 여성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 전역에서 가혹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수많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 수준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것이고 더 많은 여성을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물론 차별은 노동계급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 여성도 노동계급 여성만큼이나 차별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부와 권력으로 차별이 주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차별 문제를 한 칸에 치워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차별받는 집단의 자결권을 언제나 방어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가 계급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과 소외를 낳는 사회의 진정한 분단선이 젠더, 성적 지향, 피부색이 아니라 계급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의 구실은 전체 노동계급을 최대한 단결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차별받는 집단의 단결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이 체제가 조장하는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등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차별받는 집단의 권리를 키우고 지키는 법률을 환영하고, 그런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싸우며, 편견을 깨는 데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차별에 맞선 투쟁은 언제나 계급 투쟁이 고양되는 시기에 도약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의 격동이 그런 사례였다. 계급 투쟁이 여성·흑인·성소수자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벌어졌고 진정한 성과를 남겼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 직후 러시아에서는 동성 결혼, 낙태권이 인정됐고 가사의 사회화가 시도되는 등 여러 진보가 있었다.

## 노동계급의 단결

노동계급은 수십 년 이래 가장 큰 공세에 직면해 있다. 노동계급의 반격이 승리하려면 온 노동계급이 단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그저 최상의 계급 투사로서가 아니라 레닌이 표현한 것처럼 “차별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으로서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여성의 비중이 커졌고, 인종도 다양해졌으며, 어느 때보다도 성소수자에게 개방적이다. 계급 단결은 지배계급의 긴축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근거한 가장 심각한 이간질을 극복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369호 | 번역 이원웅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진희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육 목적으로 영화를 보여 줬더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 영화를 본 뒤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해 했다는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가 수사관에게서 심문받은 내용은 시종일관 학생들이 수업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억압받는 다수〉뿐 아니라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드바르 몽크의 유명한 그림 〈키스〉를 교사가 보여 준 것도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말이다.

이 수사의 수구 보수적인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육청과 경찰 같은 국가기구가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이용해 성에 관한 논의 자체를 더럽거나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며 교사의 업무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려 이런 방치야말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자연스런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



8월 31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교사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나타났다

하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범죄 취급해 경찰 손에 넘기고 ‘학생 보호’ 운운하는 교육청 성인식개선팀과 장휘국 교육감 등 광주시교육청 직원들과 관료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야말로 수치스럽다.

‘학생과 교사의 권력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수사를 옹호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불쾌함을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이고, 교사 책임인가? 50대 남자가 무슨 성교육이냐는 국지혜 같은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의 노골적인 남성 배척이 어찌면 더 솔직한 것일 수 있다. 페미니스트인 최현희 교사가 보수적인 일부 학부모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성단체들의 일치단결된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그때는 ‘학

생-교사의 권력 차이’를 내세워 경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없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과 성 관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되며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나 관심이 금기시된다. 학생들은 금욕주의를 설교받으며 문제 풀이 기계로 살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혼란을 겪기 쉽고 숨막히는 학교에 대한 불만을 교사에게 표출하기도 쉽다. 학생들의 혼란이나 불만을 이유로 경쟁적 교육을 지행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교사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교육이 여성 교사, 그것도 일부 여성단체들이 승인하는 ‘젠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성을 다루려는 시도는 모두 격려받아야 한다. 비록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다 해도, 새로운 시도가 없다면 교육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성범죄와 성(평등) 교육을 혼동해선 안 된다.

## 전교조 대대에서 확인된 압도적인 배이상헌 방어 정서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여성단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사안이 스쿨미투 사안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런 폄소와 이간질에도 굴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8월 31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의 약 80퍼센트(약 300명 중 235명)가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수사를 지지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학생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려 왔지만, 진보적 교사들 대부분은 이것이 국가기구의 교사 노동자 탄압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독단적 행정을 정당화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월 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 진행 중”이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담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한마디로 각 교육청이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해선 안 되고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수록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진보적 지지자들의 실망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또,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전교조 지도부와 전교조 여성위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다. 조합원의 교육서비스 제공(수업)이 국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조합 집행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위축감을 느끼기 쉽다. 조합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특히 전교조 여성위의 행동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전교조 여성위가 추천한 영상을 수업 교재로 사용한 동료 교사가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그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전교조 여성위의 일부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자기 방어 활동을 ‘2차가해’라고 비난하며 전교조 지도부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와 그 지지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거나, 이

교재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므로 성평등 수업이 아니라는 일부 여성단체들과 일부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곧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성범죄가 아닌, 수업이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경찰이 나서서 수사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자들 사이의 토론이나 교사-학생 간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을 편들어 온 일부 여성단체들(광주전남여연 등)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사안의 성격을 따져 보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경찰 수사, 직위 해제로 이어질 근거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매뉴얼은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조치 철회와 경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매뉴얼 보완을 말하는 것은 당면한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유추로 주장하자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당사자를 방어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개정만 말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주장은 대중 자신의 저항의 싹을 죽이고 정치인들의 개혁 입법에 맡기자는 대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성 비위’ 심의위원회에 교사, 학생,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자(광주여성민우회 8월 16일자 성평)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애민 교사 탄압을 사실상 지지해 많은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일부 여성단체 간부들이 책임은 회피한 채, 협상 자리에 들어가 결국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이용하려 들 수 있음을 나

타낸다.

게다가 ‘젠더 전문가’가 ‘성 비위’ 심의위원회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성평등의 진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일부 학생들의 불쾌함을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삼으며 권위주의적·관료적 행정에 협조한다면, 배이상헌 교사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며 고초를 겪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한다. 국가기구(사용자)가 교사(노동자)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일(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사용자 측의 계급투쟁)이라는 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당면한 과제를 방치한 채 매뉴얼 타령만 해서도 안 된다. 억압적 교육에 반대하고 개방적인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배이상헌 교사의 저항에 지지를 제공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세계화는 끝났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에서 열린 '맑시즘 2019'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2019년은 1989년 동유럽 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주의 정권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돌이켜 보면, 동유럽 혁명은 세계 자본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화는 세계, 특히 유럽을 두 초강대국 진영으로 나눈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가시화했습니다. 그것은 서방 자본주의의 수장인 미국이 모든 국민 경제를 신자유주의라는 자유 시장 규범 아래 복종시키고 세계 체제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이런 통합은 사실 1980년대 초 제3세계 부채 위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냉전 종식은 세계 자본주의를 갈라 놓은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세계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측면은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의 발전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이 점점 더 초국적인 수준에서 조직된다는 것입니다. 다국적기업의 힘이 이를 가장 눈에 띄게 보여 주지만, 여러 기업의 다양한 프랜차이즈나 위탁 계약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생산이 조직된다는 점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대한 대만 기업 폭스콘은 중국에서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해(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음을 강조하는) 애플 사의 제품을 최종 조립합니다.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의 발전을 실감케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변화는 제조업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 쇠퇴하고 중국이나 남반구 일부 지역에서 팽창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두 번째 측면은 국제 무역이 더 빨리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체로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가 발전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무역은 흥미롭게도 대부분 다국적기업 내에서, 즉 그 기업에 속해 있는 한 현지 기업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 기업과 거래하는 식으로 이뤄지거나, 적어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마지막 측면은 1930년대 대공황 이전처럼 세계적으로 통합돼 있으며 유동성과 이동성이 높은 금융 시장이 다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거대 투자는 행의 경제적·정치적 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융 세계화를 논할 때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을 떠올립니다. 흥미롭게도 두 거대한 초국적 은행은 1920년대에



세계적인 '반세계화' 운동의 시작을 알린 1999년 시애틀 WTO 정상회담 반대시위. 세계화는 언제나 왼쪽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극우가 지금 위기에서 정치적 수해를 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변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으며 이런 변화의 가속화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예컨대 제3세계 부채 위기는 여러 남반구 국가에 경제 개방을 강요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때 신자유주의가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약화했지만(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할 것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세계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떠들썩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의 가장 조악한 예는 <뉴욕 타임스>에서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5년에 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입니다. 유머 감각도 없고 몇 년 후 자기 주장이 어리석어 보일 것임을 내다보지 못한 프리드먼은 세계화가 세계를 훨씬 평등하게 할 것이고,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극심한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의 좌파 버전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제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

다. 《제국》의 내용 또한 세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온 경계를 자본주의 세계화가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 경제적 징후

그러나 세계화는 언제나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1990년대가 끝나기 직전 시애틀 시위와 그것이 상징하는 국제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반(反)세계화' 운동이라는 부정확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반세계화' 운동은 사실 신자유주의적 형태를 취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안 세계화" 운동이라는 더 정확한 명칭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우리가 겪어 온 형태의 세계화는 언제나 왼쪽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세계화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는 2007~2008년 금융 시장 붕괴와 그 후 이어진 장기 불황입니다. 이는 세계경제에 선명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세계화의 한 가지 징후는 국제 금융 흐름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 분기별 국제 자본 흐름

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1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2008년 이래 이 수치는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금융의 이동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기의 한 징후입니다.

국제 무역 성장도 둔화했습니다. 세계화의 도취감이 극에 달한 1990년대에 국제 무역 증가율은 세계 GDP 성장률의 두 배였습니다. 국제 무역이 세계 GDP보다 두 배 빨리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율은 거의 일대일입니다. 국제 무역 증가율이 GDP 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몇 달 전 <이코노미스트>는 제가 언급한 사례와 다른 많은 사례를 들며 '슬로벌라이제이션(Slobalization)', 즉 세계화가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다뤘습니다.

2008년 금융 시장 붕괴가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 만큼 이런 변화는 구조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 정치적 반발

그러나 세계화의 위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를 겨냥한 정치적 반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극우가 이를 주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벌인 무식한 군사 행진은 그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워싱턴 한복판을 탱크로 가로지르는 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니. 이탈리아에는 기성 정치를 지배하는 극우 정치인인 부총리인 마테오 살비니가 있고, 프랑스에는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수사를 잘 들어 보면 세계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이주민을 적대하

는 인종차별을 세계화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내놓습니다. 트럼프 식으로 표현하면 '국제 엘리트'들이 이민자를 계속 들여와 우리 나라의 문화를 망치고 '정주'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파산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 위기의 산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위기의 후유증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는 정치적 반발을 낳았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와 생활 수준에 대한 장기적인 압박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뚜렷했고 영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08~2009년의 장기 불황이 초래한 충격도 중요하지만 주요 지배계급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취한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긴축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긴축이 진짜로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신자유주의는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어쨌면 우리가 탐욕스럽게 꿈꿔 왔던 것보다도 더 부유하게 했어. 신자유주의는 이번 위기를 촉발했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 서민들이 치러야지. 일자리, 공공서비스, 교육 따위를 삭감할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테지.' 지배계급은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위 '포퓰리즘' 운동은 신자유주의 엘리트가 세계경제를 운영한 방식, 특히 위기의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반발입니다. 비록 '포퓰리즘'은 사태를 매우 부정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틈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세계 곳곳의 극우를 고무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적 지위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만회하려고 해 왔다. 트럼프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동원한 장갑차

말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주요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체제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다시 세계경제에 반작용을 가합니다. 특히 세계화의 측면에서 이 반작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세계화 시기에 서로 경제적으로 깊숙이 얽힌 두 나라가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 “경제지리적” 충돌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사랑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고위 경제 관료들과 회의를 하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매겨, 관세를 매기란 말이야”라고 했고 골드만삭스 출신 경제 고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얻어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문제의 인물, 게리 콘은 [국가경제위원회(NEO) 위원장에게] 사임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몇몇 무역 정책 고문들, 예컨대 트럼프가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같은 자들도 관세를 원합니다. 나바로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나바로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중국을 끼고 발전시켜 온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를 미국으로 되찾아 오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나바로가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면 세계화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단지 트럼프나 나바로의 별난 성향 때문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루트왈은 스스로 ‘전략가’

라고 칭하는 매우 명석한 우파 사상이입니다. 1990년대 말 세계화 시대에 루트왈은 《터보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세계화 ‘굿판’이 온통 혼란에 빠지리라 예측합니다. 꽤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루트왈은 “경제지리적” 충돌의 시대, 즉 주요 국가들 사이의 충돌이 주로 경제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패권이 여태껏 직면한 도전자 중 가장 위협적인 상대입니다. 소련은 군사적 위협이긴 했지만(특히 핵무기를 확보한 후에는 더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면에서 소련보다 더 위협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정치적·지정학적으로 미국에 극도로 종속됐습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한 일본과 달리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안보 동맹에 끼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을 태평양 밖으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미국 패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로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관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만큼 비용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국가의 전략을 걱정합니다. 중국 국가의 핵심 전략은 “중국 제조2025”입니다. 시진핑은 이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 합니다. 북반구의 다국적기업들을 위한 미숙련 제조업은 이제 그만두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고급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IT처럼 이미 확립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

된 부문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제가 모르는 온갖 새로운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에 엄청난 위협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조업 쇠퇴는 미국 자본주의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5~20년 사이에 미국에서 등장한 가장 크고 번창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바로 FAANG, 즉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었습니다. 즉, 고수익 IT 부문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FAANG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에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처럼 대응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미국 자본주의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에서 관세 문제보다 더 광범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거대한 중국 IT 기업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사카 G20 회담 중에 시진핑을

만나 협상 재개를 거론하며 화웨이에 건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은 이미 금지했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트럼프는 국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의 다수는 ‘안 돼, 화웨이는 위협이고 계속 강경하게 대응해야 해’ 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 자본주의의 디지털 시스템에 너무 깊숙이 침투하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을 둘러싼 더 큰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 제국주의 갈등

세계화의 전성기인 1990년대와 그 직후를 돌이켜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논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국》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제국주의와 국민국가는 끝났으며 자본주의는 국가 수준을 뛰어넘었고 이제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는 모든 국경을 뛰어넘은 초국적 제국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제국주의

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제국주의란 근본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서로 얽히는 것입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자본이 계급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시장과 투자 등을 위해 경제적으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영토, 군사적 지배력 등을 위해서도 경쟁합니다.

이제는 저뿐 아니라 이런 주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하트와 네그리의 입장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이 이를 보여 줍니다.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갈등합니다. 중국은 민간 산업뿐 아니라 군사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고전적인 지정학적 갈등을 벌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주된 전장은 아닙니다. 현재 주된 전장은 “경제지리적” 갈등, 즉 무역 갈등이고 아까 언급했듯이 특히 기술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심대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 세계화의 전망

그러면 답하기로 했지만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세계화는 끝났는가? 짧게 답하면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금융 수준에서 자본이 맺은 초국적 상호의존 관계는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는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깊습니다. 사실 첫 번째 세계화, 즉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 영국 패권 하에서 진행된 세계화가 후퇴했을 때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오늘날 그 피해는 훨씬 막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블록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손발을 맞춘다면(그것이 가능한지는 언제나 흥미로운 물음입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블록도 나타날 수 있겠죠.

가장 독특한 〈파이낸셜 타임스〉기자 중 하나인 존 플렌더는 몇 주 전 기사에서, 지역 블록이 형성되면 가장 취약해지는 곳은 이른바 신흥국들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의 경제 대국들이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어느 블록에 속할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신흥국인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최근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 ▶ 9면에서 이어짐

세계 자본주의의 지역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꽤 설득력 있는 전망입니다.

좌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민족주의의 성장에 굴복하면 좌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유보 조항을 달더라도)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를 옹호해야만 민족주의의 성장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의 진정한 모습은 최근 유럽연합 내 인사 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최고 직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막 합의를 했는데, 늘상 유럽연합을 지배해 온 기존 신자유의주의 패거리가 영국이 맡던 자리를 나눠 가졌고, 프랑스가 독일보다 약간 득을 봤습니다. 물론 결국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독일의 뉘이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은 유럽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국제 금융 체계에서 유로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치인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의 맨얼굴을 보고 싶다면 라가르드가 바로 그 얼굴입니다. 라가르드는 처음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유로존 위기 때에는 국제 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를 박살 낸 삼두마차, 즉 유럽연합·IMF·유럽중앙은행 중 두 곳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라가르드는 세 번째 마차를 탈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얼굴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민족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과 엮일 순 없습니다.

## 국제주의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의 위기에 맞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자본주의적 국제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민족주의와 국가 간 장벽을 거부하는 가짜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도, 위기의 후유증을 배경으로 성장해 이를 위협하고 있는 민족주의 또한 거부해야 합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세상 모든 자들의 국제주의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난민을 방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개막식 연단에는 [지중해에서 수많은 이민자를 구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스페인 소방관이 올라왔습니다. 그 분은 오늘날 국제주의가 어떠한지 하는지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상징입니다. 이런 종류의 국제주의는 피억압자·피착취자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단결할 가능성을 열 것이고,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분단을 깰 것입니다. 이 분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리적 분단이며 여러 면에서 계급의 분단을 반영합니다.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혁명은 세계화가 지속해 온 부국과 빈국의 분단을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의 진정한 대안은 국제주의다. 이주민·난민을 방어하는 투쟁도 그런 노력의 중요한 일부다. 8월 18일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

## 토론 정리

미국과 중국에 관한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미·중 갈등이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시작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은 군사력의 60퍼센트를 태평양으로 이전해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을 추진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견제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그 협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 없는 “환태평양 동반자 관계”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바마는 TPP에 가입하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중국은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날려 버렸는데 제 생각에 이는 여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바마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제기하는 위협에 이미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미국이 중동에 매인 채 중국에 집중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 신경을 쏟을수록 중국에 집중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이 중동에서 '중심축을 이동'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사실 이 점에서 오바마와 트럼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중동에서 전쟁할 열의는 없습니다. 둘 모두 미국이 중동이라는 수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몇 주 전 트럼프가 네오콘 고문들을 무시하고 이란과의 대결을 더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시리아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거부한 오바마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중동에 남아야 합니다. 중동에 걸린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에 휘말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정권이 시리아에 개입한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적 제국주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입니다. 영국도 20세기 전반에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두머리라면 모든 곳에 개입해야 하고 그러면 진정한 위협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 노동계급의 힘

그럼 세계화에 대한 더 큰 질문에 대해 보겠습니다. 운송이 가치를 더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마르크스가 《자본론》 2권에서 이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한 단위가 표현하는 가치를 줄이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렴한 상품은 더 적은 가치를 표현하고 경쟁에 유리합니다. 온갖 공급 사슬과 적시 생산 체계는 상품 한 단위가 표현하는 가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가치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동가치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작동과 수익성이 노동자에게 의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체제는 노동자를 착취하지만,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의존합니다. 조지프 주나라 동지가 비버리 실버의 책 《노동의 힘》을 언급했는데, 이 책은 훌륭한 책입니다.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도 훌륭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의 재편이 노동자들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자본주의는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의주의적 세계화가 노동자의 힘을 약하게 했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국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배치

된 노동자들은 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관적 요소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이익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류 노동자들의 사례가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물류 노동자들도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중해에 있다는 점 때문에 공급 사슬에서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많은 수가 사하라 이남이나 북부 아프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인 이들은 때때로 자기 나라의 혁명적 정치 전통에 영향을 받으며, 조직하고, 파업하고, 공급 사슬을 멈추고, 고용주에게서 양보를 받아 내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중국 지배계급이 기술 향상을 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중국 노동자들이 점차 비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노동자들은 그들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업이 벌어졌고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저항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내뿜을 강요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는 그저 노동자들이 짓밟히고 패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분이 묘사한 변화를 때문에 기존 조직 형태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자본의 국제적 통합에 직면해 노동계급이 꼭 내리막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다음번에 위기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질문입니다.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금리 하락이나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채권 가격으로도 나타납니다(이는 시장이 경기 둔화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값싼 자금, 양적 완화라는 마약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나 라가르드 같은 자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 줘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자본주의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일종의 금융 체계상의 조작에 필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기가 또 후퇴하면 그 손해자는 누구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신자유의주의 엘리트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는 데 성공한다 해도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손해자는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극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회주의적 좌파가 신자유의주의도 극우도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극우에게는 신자유의주의의 대안이라 할 만한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유럽의 극우, 예컨대 유럽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탈리아 극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맞서 긴축을 거부하자고 떠들어 댁니다. 그러나 실천에서 그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할 사회주의 좌파가 부상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런 물음은 결코 공평무사한 태도로 답할 수 있는 학문적 물음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그 대답의 일부는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아일랜드 혁명가 제임스 코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예언자는 바로 자신이 예언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북취 이예송 / 번역 오수민

※ 지면 제약 상 내용을 다소 축약했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800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얻은 소득

### 장호중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추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그동안 고집해 오던 자회사 전환 방침을 포기하고 전산·승강기를 제외한 파견용역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가 올해 11월 1일부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기존 정규직과 완전 통합된다. 일부는 ‘환경유지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두 개의 직군(일반직, 운영기능직)으로 나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직군과 임금체계가 추가된 것이다. 환경유지지원직의 임금은 운영기능직의 86퍼센트 수준이다.



서울대병원의 성과가 유사한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할 때 9월 4일 남성 해단식

노동조합은 전산직도 정규직화 대상으로 할 것과 정규직과의 통합직군화를 요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관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는 그동안 ‘저임금 고착화’라는 비판을 받아 온 표준임금체계(정부안, 공공병원TF안)에 비하면 상당히 나은 조건이다. 표준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이번 합의안은 경력에 따라 호봉이 꽤 오를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단협상 보장된 각종 수당과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시간외·야간 수당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은 꽤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기대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함께 싸워 온 다른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자회사를 강요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국립대병원 연대 투쟁

‘자회사’ 등 무늬만 정규직화 하려는 사측과 이를 방지하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껴, 올해 3월부터는 3개 산별연맹에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섰다. 서로 다른 산별연맹

에 속한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기존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또 공동 투쟁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며 상승 효과를 내기도 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공동 파업은 단결의 가능성과 정부를 향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보여 줬다.

2018년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조의 연대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 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정

규직화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사용자들은 정규직의 반대를 자회사 전환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았다.

국립대병원의 관할 부처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잖이 압박을 받았다. 장관 취임 전에 국립대병원 청소년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월 22일부터 시작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차 공동 파업과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은 마침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 벌어졌다. 유은혜는 조국을 방어하다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독립적으로 잘 싸우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이롭지 않다.(관련기사 4면)

이번 서울대병원의 성과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임명 강행으로 계급적 불만을 사고 있는 지금 노동운동은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 이재환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9월 2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은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공사의 처우 개선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 호봉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주차관리, KTX특송, 셔틀버스 운행,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부분이 자회사 무기계약직이다. 과거에는 철도공사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맡기거나 외주화했다. 현재도 정규직이 하는 일과 중복되거나 긴밀히 연결돼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철도공사 역무원이, 신이문역은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이, 과천역은 민간 용역회사 SJ파워가 운영하는 식이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은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40~45퍼센트 수준이다. 심지어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철도공사

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실정이다.

지난해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공사와 동일·유사 업무에 일하는 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자회사와 맺는 위탁계약에서 실제 일하는 인원보다 적은 계약 인원을 책정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책정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핑계만 대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호봉제 도입도 노동자들에게 절실하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의 사정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를 헌신짝 취급한다.

### 좋은 자회사?

인력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574곳 지하철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역마다 최소 5명의 역무원이 상시 필요하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역 한 곳당 평균 2명을 배치하고 16곳에는 1인 근무를 시키게끔 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혼자 근무하던 역무원이 쓰러져 안전 관리 담당자가 부재한 일이 벌어졌다.

한 여성 노동자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어느 역에서는 버리기 아깝다고 새 마을호 침대 칸에서 10년 넘게 쓰던 침구류를 [노동자 숙소에] 주기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여직원이 쓰던 숙소를 정규직에게 내주고 비정규직에게는 현재 쓰지 않는 대표창구 공간에 방을 만들어 줄 테니 숙소로 쓰라는 것입니다. … 녹물이 나오고 자주 막히는 세면대가 있는 여직원 공용 화장실에서 씻고 생활하라는 비상식적인 처우에 저는 황당하고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싶고 사람답게 노동하고 싶습니다.”(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2019년 임단협 속보>)

이런데도 철도공사는 문재인 정부 방침대로 자회사 직원도 정규직이라며 자회사 노동자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지난해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청소년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깎였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좋은 자회사’ 운운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 준다.

철도공사는 용역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을 관철시키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코레일네트웍스 업무는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댔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생명·안전 업무라고 인정한 KTX 승무원 553명, 전기원·차량정비원 등 296명에 대해서도 아직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직접고용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비정규직이기 전에 사람이다”

“십수 년간 자회사 노동자로서 처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정규직화한다면서 용역 자회사를 방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평생 최저임금 강요하는 기획재정부, 생명·안전 업무라고 판단한 업무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 우리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들이대며 그동안 갑질과 협박을 해 온 코레일, 그리고 코레일 갑질에 알아서 건다는 식으로 노동자를 억누르고 희생만을 강요해 온 모든 자회사들에 맞서야 합니다.”(조지현 철도고객센터 지부장)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들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모두 90퍼센트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최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로 가입한 수서고속철도 승무원들도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자회사 노조들 중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9월 1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추석 대수송” 기간에 파업을 하는 것이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 요구를 거부하고 파업 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철도노조 정규직 조합원들도 9월 초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도록 설득하고 조직해 가야 한다. 이런 활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쟁 조직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들 모두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것이 사측의 이간질과 책임 전가 시도를 막고 요구를 쟁취하는 데 이로운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